

안보통일센터

NATO식 핵공유(Nuclear Sharing)
- 의미와 시사점 -

2017. 10. 19



SECURITY
FOCUS

안보포커스



재단법인
여의도연구원
THE YEUIDO INSTITUTE

【 차례 】

1. 나토의 핵공유 프로토콜	1
2. 핵공유 방식 변경 : 핵계획그룹(NPG)의 창설	3
3.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	5
# [참고-1] 미국의 유럽內 전술핵 잔류 결정의 배경	6
# [참고-2] 핵공유와 관련, 미국의 현실적 고민	7

1. 나토의 핵공유 프로토콜

□ 유럽內 전술핵의 소재

- 현재, 유럽에 남아있는 미국 핵탄두는 200~330기 수준 추산
- 2015년 현재, 네덜란드·벨기에·독일·이탈리아·터키 등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전술핵(B-61) 탄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짐

□ 전술핵 운용방식 : 핵공유 메커니즘

- 전술핵은 해당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탄약지원대대(MUNSS)의 전적인 관리와 통제 아래 있고, 현지 해당국 정부나 군 당국의 접근 권한 없음
-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투대비태세 점검이나 정비, 교체 등의 일상업무 역시 미군이 수행
- 다만, 전술핵 탄두를 실어 적군에게 투하하는 임무는 기지를 나눠 쓰고 있는 해당국가 공군이 담당
 - ※ 이 때문에 유럽의 미군 전술핵 탄두를 핵공유 메커니즘이라고 부름
- 이에 따라 해당국가는 자국의 공군 주요 기종을 B-61 탄두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보유
 - ※ 독일과 터키 기지에서는 이전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자국 공군기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퇴역함에 따라 미 공군 F-16과 F-15가 직접 운반과 투하까지 담당
- 전술핵 가동 절차 :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, 국무장관으로 구성된

국가군사지도부(NMA: Munitions Support Squadron)가 긴급행동 메시지(EAM: Emergency Action Message)를 발신 → 유럽기지의 미군 MUNSS가 이를 수신, 진본 확인 후 미군의 모든 핵무기에 부착된 PAL(Permissive Action Link) 코드를 입력, 현지 공군에 인계 → 이들 공군이 핵무기를 자국 전폭기에 장착해 발진

-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국의 동의 또는 결정 없이 전술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
- 핵공유 프로토콜의 의미
 - ✓ NATO의 핵공유 프로토콜은 초기에는 미국이 유럽측 의사와 상관없이 재래식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지 모른다는 공포를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의미가 있었음
 - ✓ 미군 전술핵은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들 탄두를 사용할지 여부, 어떤 대상을 향해 언제 사용할지 등의 논의는 NATO에 위임돼 있을 뿐, 전술핵이 위치하고 있는 개별국가가 별도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님
- 전술핵 탄두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개 전술핵 배치국가뿐 아니라 NATO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고, 의사결정은 참여국가 모두의 만장일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기본원칙
 - ✓ 핵 전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랑스를 제외한 27개 회원국(냉전 종식 이후 NATO에 가입한 동유럽 및 舊소련국가들 포함)이 동등하게 결정권을 공유하는 구조

2. 핵공유 방식의 변경 : 핵계획그룹(NPG)의 창설

□ 미국의 유럽안전보장에 대한 유럽 각국의 의구심

- 유럽 각국은 “미국이 과연 워싱턴 핵 피격을 각오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” 의구심
- 이에,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 선택
- 서독,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
 - ※ 이에, 서독은 핵사용 여부를 비롯한 나토의 주요 군사행동 결정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해야 한다고 주장

□ 핵공유 방식 변경, NPG 창설(1966.12)

- 전시상황에서 핵사용 결정권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
- 이에, 유럽 주요국가들은 핵사용과 관련한 작전계획(OPLAN) 수립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나토 핵계획그룹(NPG) 공식 창설

□ NPG 역할 및 운영방식

- (역할) 회원국 사이에 핵정책에 관한 문제를 기획, 논의, 결정하는 주요기구
- 회원국 전체의 핵정책을 관장하고 조율하며, 핵 확산이나 군축 같은 이슈도 함께 논의

- (운영방식) 주요 나토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(주로 국방장관)가 참석하고 정기회의가 주축
 ✓ 각료급 정기회의는 1년에 1~2회 개최
- NPG의 논의를 위해 별도의 상설 지원조직 구성, 운영
 ✓ (1968) NPG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그룹(Staff Group) 구성
 ✓ (1977) 관련 논의의 연속성 강화와 기술적 자문을 위해 고위그룹(High Level Group) 구성

□ NPG의 주요 성과 : INF 체결

- 1970년대 후반 소련이 SS-20 중거리미사일 전진배치를 통해 서유럽을 압박하자, 1977년 나토는 NPG에 중거리핵전력 현대화 필요성 검토
- 이에 따라, 1979. 12월 나토 각료회의는 소련과 중거리핵전력 감축 협상과 함께 미국 퍼싱-2 미사일과 지상배치순항미사일(GLCM)의 서유럽 배치를 동시 추진하는 '이중 트랙(dual track)' 만장일치 채택
- 이후 1980년대 소련의 핵전략이 크게 수정되면서 1987년 중거리 핵전력조약(INF) 체결
- INF가 현재까지 미·소(러) 핵강대국의 중거리미사일 전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핵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버팀목 역할 기능

3.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

□ 전술핵 재반입의 의미

- 미군의 전술핵이 국내에 재반입될 경우 그 의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측의 정치적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
※ p.7의 [참고-1] "미국의 유럽內 전술핵 잔류 결정의 배경" 참조
- 전술핵 재반입의 현실적 가치는 북한과의 담판을 전제할 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쓰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는 근거
-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 완결단계 도달 고려時, 전술핵 한반도 재반입은 '한반도 핵균형'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서 여전히 유효
※ '한반도 핵균형'은 북한의 핵무장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,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포기 달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임

□ 나토의 NPG 벤치마킹

- 나토의 전쟁기획 관련 3단계 논의기구는 형태상 한미동맹의 군사 구조와 흡사 : 각국 정부수반 혹은 대표와 국방장관 협의체(최상위)
 - 각국 군 최고지휘관 협의체 - 연합 혹은 동맹사령부 편제
 - ✓ 나토 : 나토이사회, 방어계획위원회, NPG 등 3개 협의체 - 군사위원회 -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 - 4개 지역사령부로 구성
 - ✓ 한미동맹 : 양국 대통령의 국가통수기구(NCMA) - 국방장관회의(SCM)
 - 합참의장회의(MC) - 한미연합사령부
- 특히, NPG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(INF) 체결 성과로 이어졌음을 주목

- 2016년부터 한·미 확장억제 협의가 양국 국방부 사이의 논의에서 ‘고위급 외교·국방 전략협의체(EDSCG)’, 곧 외교·국방 2+2 체제로 바뀔으로써 NPG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
- 이에 따라, 우선 EDSCG의 실무적·이론적 지원을 담당할 공동 상설조직의 구성이 시급
 - ※ 포괄적·창의적 대안을 고민하는 공동 상설조직이 마련되면 확장억제 논의를 업그레이드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

[# 참고-1]

미국의 유럽內 전술핵 잔류 결정의 배경

- 2010. 5월 NPT 점검회의에서 총 9개 유럽국가가 전술핵무기 철수 요구
- 그럼에도, 미국측이 현재의 전술핵 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전술핵 탄두가 미국이 NATO 동맹국에 대해 제시하는 정치적 의지(political will)의 상징물이라는 암묵적 공감대 때문
- 유럽의 B-61 탄두는 그 군사적 실효성은 제한적이지만, 유럽국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‘핵우산의 물리적 상징물’ 혹은 ‘국제정치적 고려에 의한 제스처’의 의미를 담보
 - ※ 1999.4월 나토정상회의의 결론 “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정치적이다. 군사적 공격에 대응해 동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불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압박을 차단하고 평화를 보존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목표” 공개
- 또한, 유럽의 전술핵무기 잔류가 對러시아 군축협상時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

[# 참고-2]

핵공유와 관련, 미국의 현실적 고민

● 미국의 핵사용 결정권 독점원칙

- 미국측 관련 국내법령 규정 : “대통령만이 핵무기 운용 및 발사에 관한 기본권한을 독점하며, 이러한 권한은 주요 동맹국이 연루된 전쟁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는다.”
- 미국측 관련 절차 : 전략핵과 전술핵을 막론하고 핵 사용은 대통령이 국방장관,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국가통수기구(National Command Authority)를 거쳐 전적으로 행사
 - ※ 영국과는 핵 사용時 사전에 협의(consultation)하기로 양자동맹을 체결해두었고 NATO 차원에서도 상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, 그러나 이들 규정은 모두 강제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핵 사용에 관한 최종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

● NPT 문제

- 미국은 유럽의 전술핵이平時에는 미국의 전적인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며, 戰時에는 NPT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나토의 비핵국가들이 운반작업에 참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
- ☞ 그러나, 이 논리에 따르면 핵 사용권한을 실질적으로 나눠 갖는 체제는 NPT 위반이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셈

● 재정 부담과 관리 부실화

- 나토 핵공유 메커니즘은 미국측에 상당한 재정 부담
 - ✓ 미국, B-61 탄두를 비롯한 전술핵 탄두를 유럽에서 유지하는데 1년 2억 달러 안팎의 국방예산 사용
 - ✓ 향후 유지·보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B-61 탄두를 현대화하려면 4~5억 달러 수준의 예산 투입 필요

● 운반 항공전력의 문제

- 독일, 당초 이 임무를 맡았던 토네이도 전폭기의 퇴역에 따라 아예 자국내 전술핵 철수를 미국과 나토에 정식 요청한 바 있음
- 미국 또한 이 임무에 투입돼 있던 F-16이 F-35로 대체되면 이 기종에 B-61 장착 장비를 탑재해야 함